

統一 지향의 大學教育

朴 宗 和
(한신대 神學科)

분단시대의 대학교육은 分斷教育의 형태를 띠어 왔다. 분단이 克服의 대상이듯 분단교육도 극복의 대상이다. 따라서 統一지향 교육은 分斷教育에 대한 挑戰이며 變革의 형태를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을 지향하는 大學教育은 한반도의 敵對關係와 不正義라는 二重구조를 해체시켜야 할 사명으로서 정치·이념적 측면의 和解教育과 경제·사회적 측면의 正義教育의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統一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고 민족 구성원 모두의 과제이다. 우리 대학의 구성 주체가 민족 구성원의 일부인 이상 통일의 문제가 大學教育의 課題임은 하나의 당위론에 속한다. 통일과 대학교육의 상호 관계는 쌍방의 주체가 동일한 민족 구성원이라는 공동 기반 위에서 설정된다. 이들의 상관 관계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통일이 대학교육에 어떠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느냐가 그 하나이고, 대학교육이 이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다른 하나이다. 대학이 민족 구성체의 한 주체이고, 대학교육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 문제를 스스로의 과제로 수용하는 한 대학교육은 곧 統一教育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90 년대에 들어와 가시화되고 있는 세계의 상황을 脫冷戰時代라 이름하는 데에는 이론이 없

을 것이다. 이것을 한반도 상황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脫分斷時代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공통으로 명명하는 냉전 시대를 한반도는 분단 시대로 경험한 때문이다.

분단 시대의 대학교육은 分斷教育의 형태를 띠어 왔다. 분단이 극복의 대상이듯 분단 교육도 극복의 대상이다. 분단은 현재적 현실인 반면 통일은 미래적 현실이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 형태가 아니다. 그것은 분단 현실의 연장이 통일의 미래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통일의 미래는 분단의 현실에 파고 들어 도전하고 변혁하면서 이루어지는 실체이다. 統一教育은 分斷教育에 대한 도전이며 변혁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 분단의 끝맺음과 통일의 시작은 동시적 사건이지, 분단에서의 도피나 분단의 연장이 통일일 수 없는 때문이다.

필자는 統一教育으로서의 대학교육의 과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통일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논

리의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 우선 남·북 당사자
 간에 진작부터 합의하고 있는 '7·4 共同聲明'에
 담긴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이라는 三大原則을
 수용한다. 이에 덧붙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가 1988년 2월 28일 발표한 '민족통일과 평화
 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에 추가된 두 가지
 원칙, 곧 人道主義·民衆優先의 원칙을 수용한
 다. 다시 말해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인
 도주의·민중우선'이라는 통일 원칙이 대학교육
 이 지향하는 통일 교육에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
 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통일 문제는 남·
 북한 쌍방의 합의와 공동의 실천으로 가능한 것
 이다. 그런 뜻에서 '7·4 공동성명'이 담고 있는
 3대 원칙은 남·북한 당사자들 간의 유일한 합
 의 사항이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 선언
 이 추가한 두 원칙을 합한 '3+2 원칙'이 최소한
 민간 차원이기는 하나 남·북 기독교대표단회의
 가 수차례나 모여 공동의 원칙으로 합의한 것이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믿는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서 統一敎育의 구체적 내용이나 커
 리큘럼을 제시할 역량도 없고 또 그럴 계제도 아
 님을 전제로 하면서 그것이 나아가야 할 志向點
 을 원칙적인 측면에서 밝혀 보려고 한다.

2. 平和敎育으로서의 大學敎育

필자는 위에 제시한 自主·平和·民族大團結·
 人道主義·民衆優先의 5대 원칙을 오늘날 한반
 도의 대학교육이 구체화할 수 있는 平和敎育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합의된
 5대 원칙이 실제로 統一을 성취하기 위한 원칙
 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내용으로 종합하면 크
 게 '平和'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5대 원
 칩 가운데 두번째로 제시된 平和의 원칙은 통일
 을 이루는 方法 내지는 手段을 뜻한다. 말하자
 면 군사적 대결이나 무력의 방법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인 것이다. 필자가 말하는 포
 괄적인 의미의 平和는 실제로 이러한 통일의 방
 법 내지는 방편을 포함하는 통일의 실질적인 內
 容과 目標를 지칭한다.

교육이 전반적으로 그렇듯이 大學敎育 역시 그
 것이 계획되고 실천되는 역사적 상황 내지는 시

대적 상황과 유리될 수 없다. 대학교육이 學問
 의 場으로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학문적 진실
 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해
 석되고 실천에 옮겨지는 經驗의 場은 구체적이
 고 특수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보편적 진실
 은 沒歷史的이 아닌 구체적인 歷史的 事件으로
 체험되고 파악되는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의 대
 학교육 현장에 연결시켜 볼 때 고려해야 할 것
 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고화된 冷戰
 構造가 세계적인 時代狀況이라면 한반도의 경
 우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分斷構造로 구체화되었
 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의 時代史的 性格과 시대
 적 역사 상황 상호 간의 관계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대학교육이 시대사적 흐름을 창
 조적으로 선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시대적 상
 황에 스스로를 한정시켜 時流에 영향 내지 굴종
 하는 방향에서 성격이 규정될 수도 있다. 그간
 의 한반도 상황에서 그리고 南韓의 상황에서
 볼 때—이 점은 기실 北韓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만—대학교육의 公共的 性格은 분명 시대적
 상황에 안주하여 자기 규정된 것이다. 즉, 크게
 보아 冷戰的 分斷狀況이었던 상황적 현실에서
 대학교육의 틀은 冷戰體制의 分斷構造에 충실한
 교육이었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의 分斷敎育의
 틀을 극복하고 統一敎育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명제는 곧 대학교육의 엄청난 自己更新과 自己
 變革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실제로 대학교육
 자체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에서보다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이 가져다 준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
 이다. 스스로의 이니셔티브에서보다는 시대 상
 황의 현실적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는 점에서 아
 쉬운 점은 있으나, 현실은 현실로 인정하고 수용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필자 스스로도 대
 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대학교육 자체가 분단 상
 황을 통일 상황으로 변혁시키는 주도적 이니셔
 티브를 상당 부분 가시화시켜 온 사실을 평가
 절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
 흐름을 부분적으로나마 주도한 경우도 많다. 다
 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대학교육의 주도적 상황 변화 역할이 자생적인

기결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外的 狀況變化가 보다 큰 폭과 깊이로 한반도 상황 변화를 강요하는 형편에 이르렀음을 경솔하게 인정하자는 것일 뿐이다.

한반도 내부에서 융솟음치고 한반도를 향해 불어 닥치는 급격한 상황 변화의 성격을 필자는 '平和追求'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반도 상황에서는 평화 추구가 統一이라는 지상명계적 틀을 지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보편화된 冷戰狀況을 反平和狀況으로, 그리고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脫冷戰狀況을 平和狀況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을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分斷狀況은 反平和的 現實이고 統一은 平和構造냐는 물음일 것이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단순 도식화된 문제 제기로 보일 수도 있으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라 생각된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 아니다'의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은 平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平和를 消極的 意味로 파악하면 '아니다'라는 답이 가능할 것이고, 반대로 積極的 意味로 파악하면 '그렇다'라는 답변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平和教育의 성격을 살펴 보기 위해 평화의 소극적·적극적 의미를 논의해 본다.

1) 消極的 平和와 平和教育

평화를 전쟁과 대칭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전통적인 平和理解이다.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평화는 戰爭의 不在狀態일 것이다. 이것을 '소극적 의미의 평화'라 일컫는다. 평화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戰爭에 관해서 몇 가지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戰爭의 역할을 政治行爲의 한 手段으로 파악하는 경우다. 말하자면 정치적 목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무력 증강은 전쟁 억제가 아닌 戰勝을 위한 방법이다. 이런 상태라면 전쟁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수가' 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전사 당해야 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실제로 한반도가 경험한 6.25 전쟁은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교육이 단순히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이 戰爭教育의 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이 문제는 전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平和를 위한 軍備擴張이라는 등식이 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수단으로는 더 이상 국가간 또는 국제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옛날 로마 제국 시대의 정치론 중에 이런 것이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위한 武裝을 하라(sic vis pacem para bellum)'는 말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義로운 戰爭論(just war)의 핵심이다. 오늘날에 와서—특히 核武裝의 시대에 와서—보면 핵무장에서 열세이던 전쟁 위협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비 확장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전자와 후자의 공통점은 바로 軍備擴張이라는 점에 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戰勝이 목적이고 후자는 戰爭抑制가 목적이다. 말하자면 후자는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화 지향인 것은 사실이나, 전쟁 억제가 꼭 군비 확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느냐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전자의 공격 지향에 비해 후자의 방어 지향이 상대적으로 평화 지향적임도 사실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冷戰時代를 규정하는 평화 체제는 바로 이러한 군비 확장을 통한 전쟁 억제(deterrence)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平和는 기본적으로 安保라는 이름의 평화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軍事安保라는 이름의 평화인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틀로 보아 '로마의 평화(Pax Romana)'라 이름하는 '힘의 優位에 따른 安保'일 것이다. 군사력 우위의 안보 체제가 앞서 말한 대로 공격 아닌 방어 체제를 틀로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방어의 경우에도 攻勢的 防禦(offensive defence)와 防禦的 防禦(defensive defence)로 그 성격이 구분된다. 공격적 방어는 공격 '의향' 유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공격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보다 유용한 평화의 길은 후자인 방어적 방어라 주장하기도 한다.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挑發性排除的 防禦(non-provocative defence: NPD)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공격 가능한 방어 체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갖춘 경우의 방어 태세를 뜻하는 것으로, 형식 여건상으로 보아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고대 국가들의 방어 성벽 구축 등이 이 유형에 속할 것이다. 다만 이런 새로운 방어 형태가 한반도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더욱 탐구해야 할 대상이다. 다만 ‘공세적 방어’의 경우 하나의 구체적 갈등의 현상을 한반도가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 간에 갈등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팀 스피리트 훈련’이 그것이다. 이 훈련을 주도하는 南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방어용이라 할지라도, 표적이 되고 있는 北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공세형 방어’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남·북 통일 문제에 접근해 가면서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의 견해가 상반되고 있는데 北이 실질적으로 팀 스피리트를 공세형으로, 말하자면 도발형으로 받아들이는 한 그 훈련은 남·북 관계 회복과 화해를 위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지적한 대로 전쟁 억제를 통한 평화 추구 전략은 군사력 우위 확보라는 군비 확장 경쟁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 전략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효용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소위 소극적 평화에 따른 平和教育 역시 똑같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는 核武器로 인한 全滅威脅의 문제이다. 실제로 전쟁 억제 전략이 힘의 우위를 전제로 하지만, 힘의 우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으며 동시에 기술적 실수로든 또는 자의에 의해서든 일단 핵 무기가 사용될 경우 核所有國 또는 非核所有國을 가릴 것 없이 모두 피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전쟁 억제 전략이 기본적으로 安定 局面維持의 安定을 이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것의 核化現象은 안정이 아닌 集團의 不安을 심는 자가당착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平和教育은 분명히 反核平和를 중심으로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한반도 주변의 핵지대화 현상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만의 非

核地帶化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핵 위험이라면 무엇 때문에 엄청난 직접 위험과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비핵화를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 비핵지대화 운동은 기실 한반도 주변은 물론 세계 전체의 非核圈化라는 보편 타당한 反核平和運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바로 평화 교육이 지니고 있는 地域的 具體性과 世界的 普遍性이 있다.

둘째는 構造化된 暴力의 문제이다. 실제로 군비 확장 경쟁은 단순한 軍事安保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그것때문에 엄청난 經濟的 消耗과 損失이 뒤따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社會福祉의 희생과 함께 安保를 구실로 하는 엄청난 獨裁와 抑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구조화된 폭력의 단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平和教育은 이러한 經濟正義의 희생과 反民主的 政治現實의 파장을 고발하고 저항하는 넓은 의미의 民主化 教育을 그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는 전쟁 억제적 평화 추구의 기본 구도는 집단과 블록 상호 간의 敵對的 對決을 표방하는 冷戰構造的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냉전 구조가 한반도의 경우에는 敵對的 分斷構造로 경험되고 있다. 이러한 적대 관계가 철예화된 이데올로기적 표현이 바로 남한의 맹신적 反共主義와 북한의 맹신적 赤化統一戰略이다. 한반도 현실에서 남·북한 어느 일방의 군사적 방법에 의한 일방적 흡수 통일은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점에서 남한의 일방적 反共教育이나 북한의 赤化教育은 이미 그 정당성은 물론 설 땅조차 잃어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더구나 전세계적인 脫冷戰化의 물결 속에서 기존의 냉전적 평화 전략은 물론 냉전적 평화교육의 퇴조 현상이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2) 積極的 平和와 平和教育

노르웨이의 평화 연구가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세 유형의 평화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平和維持(peace-keeping)의 유형으로서 군사적 내지 전투적 요인을 분리시킨 채 이미

존재하던 상황을—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있는 그대로 회복시키는 방안으로서의 평화를 말한다. 이것은 앞에 설명한 消極的 平和의 틀에 속한다.

둘째는 平和造成(peace-making)의 유형으로서, 예컨대 침예하게 대립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래의 현실 상황을 있던 대로 회복하거나 아니면 상황 변화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변화된 또는 회복된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 구조를 담지할 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진행되는 과정의 中間段階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형식논리로 보면 한반도의 경우 통일 지향의 중간 단계로 제시된 북한의 ‘연방제’가 말하는 기초 단계, 그리고 남한의 ‘한민족공동체’가 말하는 소위 相互認定과 共存의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平和建設(peace-building)의 유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平和構造를 정착시켜 가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積極的 平和의 단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平和建設은 한반도의 경우 단지 統一國家 형성이라는 형식 요건의 구비만이 아니라 그 속에 실질적 내용으로 담겨야 할 社會正義, 民主化, 人權保障, 環境保全 등 삶의 質이 구체화되는 단계이다. 이 경우를 가리켜 ‘샬롬(Shalom)’이라는 이름의 平和라 일컫는다. '90년 3월 서울에서 모인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가 앞으로 다가올 세계 공동체의 과제를 ‘샬롬’으로 설정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正義·平和·創造秩序의 保全(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으로 명명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앞서 살핀 대로 오늘의 脫冷戰時代에 있어서 소극적 평화 내지는 그에 바탕을 두고 있는 소극적 평화 교육의 위기를 간략하게 지적했는데 한반도의 상황과 결부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예컨대 베레스트로이카의 물결이 만들어 낸 東歐圈의 變化를 계기로 분명히 東·西冷戰構造가 깨진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세계 상황의 변화는 곧바로 한반도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미쳐야 하리라

본다. 그것은 南·北 和解와 協力の 체제로 이행하는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곧 이념적으로 말해서 反共主義的 내지 赤化統一的 敵對關係의 해소와 平和共存이라는 단계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취할 수 있는 平和教育은 일종의 和解教育의 형태를 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東·西冷戰의 해빙이 곧 冷戰構造 자체의 종말은 아니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세계 전반에 팽배한 貧富葛藤 곧 南·北問題가 해결은 고사하고 심화·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政治的 平和가 곧 經濟的 平和라는 正義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南·北冷戰은 이제부터 엄청난 파고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경우는 앞서 말한 東·西理念 갈등 구조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남·북한 내부에 있어 貧富葛藤이라는 南·北冷戰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이중 구조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정치 이념적 측면의 和解教育과 더불어 경제 사회적 측면의 正義教育의 과제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는 뜻이다. 즉, 우리가 말하는 統一 지향의 평화교육이 구현해야 할 두 가지 축은 바로 和解와 正義를 내용으로 하는 平和教育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分斷現實은 바로 이러한 이중적 構造 곧 敵對關係와 不正義라는 二重構造惡의 온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앞서 소개한 Galtung의 평화 유형과도 상통하는 ‘평화 모델’의 세 측면에 유념하면서 적극적 평화에 기초한 평화 교육의 지향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평화 유지’에 속하는 평화 유형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레알폴리틱(Realpolitik)의 현실로서 그 주체 세력은 늘 상 기득권층 엘리트 군상이었다. 실제로 우리 教育社會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엘리트 교육’은 이러한 레알폴리틱적 냉전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형태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두번째로 ‘평화 조성’이라 이름하는 유형은 소위 비폭력 문화 창출을 통한 평화 성취의 방법으로, 간디(Ghandi)나 킹(M.L. King)과 같은 평화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일종의 統合的 協力(integration)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평화 주

체는 실제로 國民 또는 民族 전체이어야 한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社會教育의 단계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平和 지향의 國民教育 내지는 民族教育의 양태를 펼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平和建設'의 단계에 이르면 구체적으로 正義(justice)가 구현된 현실이어야 한다. 특히 제3 세계적인 각도에서 보면 정의가 성취되어야 할 상황은 支配와 從屬이라는 또하나의 분단 구조로서, 이것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不義와 抑壓의 희생자들이 民衆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民衆教育의 형태를 띤 것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正義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價値中立의 態度가 아니라 萬人의 正義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선적으로 민중의 정의를 실현하는 선택적 사랑의 포출과 결단(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의 民衆教育일 수 있어야 한다.

3. 統一을 향한 平和教育的 貢獻

위에서 平和의 性格 및 類型을 살펴 보면서 그에 따른 平和教育의 원칙들을 약술했는데 이제 이러한 기본 틀을 어떻게 民族統一 成就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의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다. 권의상 冒頭에서 지적한 대로 '5大統一原則'에 따라 다시 원칙적인 차원에서 대학교육의 과제를 다루어 보겠다.

1) 民族自主의 教育

統獨의 과정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 물결과 東歐圈의 변화가 통일의 국제적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민족 통일로 연결시킨 것은 독일 민족의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民族自主의 結巢이라는 점이다. 蘇聯을 정점으로 하는 동구권의 實利追求가 독일 민족의 自主의 實利를 충분히 보장한 바탕 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된 결과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도 이러한 국제적 환경의 유리한 전환의 계기를 통일로 수렴할 수 있는 민중의 결집된 自主力量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이런 각도에서 먼저 民族 同質性을 어떻게 확인하고 회복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동시에 남·북 간에 크게 벌어졌다고 보는 異質性 克服의 과제를 제기한다. 그런데 필자의 소견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異質化 현상은 따지고 보면—그것이 인식과 발상, 체제, 이념 또는 문화 생활 어느 것이든—敵對的 내지 冷戰的 對決이라는 상황적 틀을 전제해 前理解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본다. 脫冷戰의 시대에 들어선 지금 異質化를 多樣化 내지는 多分化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南韓의 삶을 획일적으로 同質化된 사회적 삶으로 규정할 수 없듯이 말이다. 민족 동질성은 그것이 하나의 生命體인 이상 화석화된 획일화가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전제로 어떻게 남·북한 大學이 분단 사고가 아닌 통일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民族大學, 民族教育의 場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가 현실적 과제이다. 학문의 普遍性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西歐化된 學問을 세계화로 잘못 인식함은 물론 그것의 主體的 民族土着化를 하지 못한 非主體性에 대해 냉엄한 반성과 갱신이 있어야 한다. 번역된 학문은 민족의 현실에서 검증되어 비판 받고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문의 民族主體化라 하여 소비니즘적 고립주의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民族主體는 국제 공동체 속의 주체로서만 가능하다. 民族自主는 분명 開放된 自主이어야 한다. 통일 문제와 연관시켜 말하면, 통일 문제의 '한반도화'는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한반도에 국한된 것으로 局地化해선 안 된다. 즉, 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구조가 곧 世界平和를 담보하는 형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세계화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통일 지향의 대학교육이 갖는 民族主體化 및 世界開放化라는 이중적 지평을 말하는 것이다.

2) 非暴力 文化的 教育

집단화된 폭력 곧 軍事武力에 의한 통일이 불가능하고 동시에 부당하다는 것은 남·북 간의 현실 인식이다. 그렇다면 냉전적 분단 상황이 만

들어낸 南의 北에 대항한 또는 北의 南에 대항한 一方的 國家安保는 그 발상과 실천에 있어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反共統一 내지는 赤化統一의 선언적·실질적 포기가 있어야 한다. 그대신 南·北을 합쳐 한반도 전체를 축으로 하는 일종의 共同安保가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되고 실체화되어야 한다. 남·북 쌍방의 不可侵宣言·平和協定の 체결, 그에 상응하는 外軍撤收와 軍備縮小가 共同安保의 원칙과 바탕 위에서 합의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실제로 사회 전반에 팽배한 軍事事文化의 척결로 이어진다. 여기에 大學社會도 예외일 수 없다. 오늘의 大學社會가 당면하고 있는 ‘최루탄-화염병의 대결 현상’은 구조적으로 보면 분단적 군사문화가 만들어낸 전혀 불필요한 희생양적 산물이다. 군사문화는 실제로 安民의 성향이 아니라 不安 자극을 통해 통치하는 反平和의 文化이다. 예컨대 오늘날 경제적으로 난맥상을 만든 속칭 ‘투기문화’, ‘한당주의’ 등이 바로 이러한 부산물에 속한다. 심각하게 사회를 증독고 있는 社會犯罪를 척결하는 데도 하필이면 ‘戰爭’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犯罪와의 戰爭이라 하는 판이니 말이다. 이러한 현상의 밑바닥에는 기본적으로 ‘제로-섬(zero-sum)’의 냉전적 발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民主方式에 따른 학문적 토론이나 합의 도출을 허용하는 대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행해지고, 그나마 체제 유지적 官學化 경향을 대학의 학문 도장이 수용하도록 강요 당하는 현실은 실제로 暴力文化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이다. 學問의 自主的 自由는 사회 전반에 걸쳐 非暴力文化의 조성과 같은 맥락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3) 和解共同體의 教育

사상과 이념 및 체제를 초월한 民族大團結이라는 통일 원칙 속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할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아직 실마리조차 풀리지 않고 있다. 작년에 남한 정부가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 원칙을 ‘民主’라는 말로 탈바꿈시켜 제기하고 있다. 民主가 타당한 개념과 실체이기에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民主를 自

由民主主義로 한정하고 북한의 人民民主主義는 배제한다고 명시한 것은 적어도 남·북 통일을 지향한 중간 단계로서의 相互認定과 共存의 주장과 도순될 뿐만 아니라 평화적 통일의 방법이라 볼 수 없다.

남·북 간의 和解는 상호 간의 실제 인정, 공동민족공동체 구성 요체로서의 실제 인정이라는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실제로 統一이 단순한 국토 통일이 아닌 民族共同體 形成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통일로 이룩될 민족공동체는 분명히 말해서 分斷의 이전 상태로의 回歸일 수 없으며 실제로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分斷史가 우리의 역사에서 지워질 수도, 무효화될 수도 없는 엄연한 현실인 때문이다. 예컨대 통일 이후 북한에 두고 온 土地를 다시 所有하기 위한 법적 수속을 밟는다는 현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서독에 피난 온 동독 출신 자본가들이 이와 비슷한 법적 수속을 밟고 있음으로 해서 統獨이 겪고 있는 엄청난 혼란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통일 지향의 和解는 기본적으로 분단으로 생긴 현실을 대승적으로 극복하면서 南의 北에 대한, 또는 北의 南에 대한 종래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統合(integration)이 현실로 인식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오늘의 大學社會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 연구와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和解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북 쌍방의 체제나 이념과 사상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그것을 不變價値로 고착화하자는 말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和合도 統一도 아니고 일종의 임시방편적 融合일 뿐이며 분단의 또다른 형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호 인정으로 시작된 바탕 위에서 분단을 정당화 내지 절대화한 부정적 요인들을 상호 비판하고 극복하고 척결하는 自己犧牲의 審判의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것이 화해의 과정이다.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요인들을 승화시켜 결합하고 화해된 바탕 위에서 統一民族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의된 제3의 體制나 삶의 양식을 도출해 내는 진정한 의미의 民主的 合意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4) 人間化 敎育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88년 2월 29일 발표한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人間化 내지 人道主義 원칙이 표명되고 있다.

“통일은 민족이나 국가의 공동선과 이익을 실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나 민족도 인간의 자유와 부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이념과 체제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배려와 조치의 시행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인도주의적 시행이 브류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統一이 만병 통치약인 양 생각하는 환상은 있을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統一의 內容과 目標은 적극적 의미의 平和가 실현되는 것이어야 한다. 분단 체제가 남·북을 막론하고 엄청난 非人間化의 길을 걸어 온 현실이 바로 통일의 길에 가서는 지양되어야 할 대상이다. 국가 지상주의나 이념 절대주의 또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民族共同體를 구성하고 있는 構成員 각자의 自由·人權·生存權을 얼마나 박탈했는지를 단순히 우리 한반도의 분단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국가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익혀 왔다. 실제로 통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족 구성원 각자의 自由와 福祉가 보장되고 확대되는 통일이 바로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이다.

平和敎育의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다. 構造로서의 平和를 다지기 위한 敎育이어야 하며 동시에 민족 구성원 각자가 실질적으로 經驗하는 삶의 내용으로서의 平和가 敎育의 대상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平和敎育이 지니는 학문적 自由의 전면목이다.

5) 民衆連帶의 敎育

앞에 언급한 ‘통일 선언’에서 다시 인용해 보겠다.

“통일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모든 논의 과정에는 민족 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별히 분단 체제 하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면서도 의사 결정 과정에서 늘 소외되어 온 민중의 참여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통일 논의와 통일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가장 민감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일 논의의 國民的 合意를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하여 도출해낼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의 主體가 누구냐는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된 하나의 문제이다.

우선 통일 논의는 물론 통일 방안을 만드는 작업 과정에 민족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는 民主的 參與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決定過程에 어떻게 주체적 참여를 보장할 것인가이다. 소위 통일 논의의 개방과 접촉 창구의 일원화 문제가 현실적 관건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행정적·제도적 차원의 책임을 정부 당국이 담당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論議의 주체와 實踐의 주체가 다르고 양 주체 상호 간에 엄청난 不信의 壁이 쌓인 오늘의 현실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北의 체제가 黨의 획일적 통제 하에 있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차라리 획일화 경쟁을 한다는 말인가? 적어도 남한의 경우 획일화가 아닌 민주적 다양화가 현실이며, 그것이 오히려 북한의 획일 체제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民間次元의 주체적 논의와 참여가 보장되고 뒷받침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大學도 학문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自主的 主體性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하나 앞의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이 참여의 주체는 모두이어야 하지만, 특히 분단 희생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民衆優先의 원칙에 담긴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歷史를 유독 기득권자의 支配 觀點에서가 아니라 被支配者의 苦難과 希望의 觀點에서 파악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역사 파악은 물론 支配構造의 民主的 更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통일 논의와 방안 立案에 민중이 독점적이지 아닌 共同主體的으로 參與할 수 있어야 비로소 民族

統一의 틀이 잡혀진다는 말이다.

大學은 民衆化될 수는 없어도 民衆의 共同主體化에 연대적 노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대학이 기독교층의 대변자적 상아탑에 안주하는 한 正義敎育을 담당한다고 자부하는 민족공동체적 대학의 장래는 보장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4. 結論을 대신하여

統一을 지향하는 大學敎育의 使命과 役割 문제를 平和敎育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원칙적

인 것들을 피력해 보았다. 중요한 것은 통일 의 當爲論 자체가 아니라 통일 염원이 담고 있는 平和를 향한 삶 의 意志와 그것을 이룩할 力量 結集을 대학교육이 최소한 學問的으로 어떻게 內實化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것은 통일의 당사자인 民族共同體의 한 主體로서 대학이 맡아야 할 役割 分擔의 책임이고 동시에 民族의 차원에서 理論과 實踐을 연계시킬 수 있는 창조적 작업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공헌의 방안과 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성과를 기대해 본다. *